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국가 간 조세인하경쟁과 집권정당 교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 분석

(1981년~2020년)

2022 년 8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찬 호

국가 간 조세인하경쟁과 집권정당 교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 분석

(1981년~2020년)

지도교수 정 광 호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이 찬 호

이찬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조세는 정부 활동을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로 정하고, 법률로 개정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세율의 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표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국가간 조세경쟁이 한국의 세율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세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밖에 경제성장률, 재정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도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함께 고려했다.

세율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래퍼곡선(Laffer curve) 등이 논의되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고 적정 세율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신자유주의 기조와 함께 보수주의 성향인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는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해왔다. 한국 역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율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간 세율경쟁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이러한 인하추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 국내정치 지형은 보수정당과 민주당계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세율 인하 및 감

세를 추진하고, 진보성향의 민주당계는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강조하고 세율 인상 및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조세경쟁에 따른 세율인하의 큰 추세 속에서 실제 집권정당에 따라 그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등의 영향으로 세율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동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SUR 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진행했다. 또한 독립변수 전기(t-1기)의 변화가 종속변수(t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다각적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관측값이 충분하지 않고 일부 비정상적(non-stationary) 변수를 포함하는 한계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 국가 간 조세경쟁, 즉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변화는 동기(t기)와 전기(t-1기) 모두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조세인하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도 인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측 세제개편안과 여당과 야당의 주요 논리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개념이 등장하며, 세율 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세는 계속됐으나 주요국 소득세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공약대로 세율 인상 및 증세를 추진할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권정당 변화에 따른 세율 변화는 소득세율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높게 유지한다고 나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법인세율은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낮게 유지하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계 집권시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율인하가 계속된 반면, 보수정당 집

권시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세를 적극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세율 인상이 나타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은 소득세율 인하는 유보하되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등 소득세율 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를 보다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높은 소득세율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며, 정치지형과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득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상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도 세율인상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우선하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한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경쟁의 측면에서 최근 세율 인상 속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모두 다양한 경제·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부담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세정책이 보다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율과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대내외적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세율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분석한다면 연구 결과가 보다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세율결정,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세인하경쟁, 증세론, 감세론
학 번 : 2014-23713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7
제 1 절 조세인하경쟁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7
제 2 절 감세론과 증세론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12
제 3 절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 ····· 18

제 3 장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변화 ····· 20
제 1 절 주요국의 법인세율·소득세율 변화 추이 ····· 20
제 2 절 한국의 정권별 법인세율·소득세율 변화 추이 ·· 24
제 3 절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3

제 4 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설계 ····· 39
제 1 절 연구 변수 ····· 39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 42
제 3 절 연구 가설 ····· 43
제 4 절 분석모형 및 자료수집 ····· 45

제 5 장 회귀분석 결과 ····· 52
제 1 절 소득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52
제 2 절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54
제 3 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 56
제 4 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독립변수: t-1기) ····· 61
제 5 절 분석결과 및 한계 ····· 66

제 6 장 결론 ····· 70

참고문헌 ····· 75

[참고] 회귀분석 기초 데이터 ····· 78

[참고] 회귀분석 결과 ····· 79

표 목 차

[표 1] 조세인하경쟁 게임이론 예시(죄수의 딜레마) ····· 8
[표 2] 감세론과 증세론 비교 ····· 15
[표 3] 김대중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 25
[표 4] 노무현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 26
[표 5] 이명박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 28
[표 6] 박근혜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 29
[표 7]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 31
[표 8]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 및 출처 ····· 48
[표 9] 소득세율 Dickey-Fuller 테스트 ····· 49
[표 10] 법인세율 Dickey-Fuller 테스트 ····· 50
[표 11] 각 독립변수의 그래프 및 차분 그래프 ····· 51
[표 12] 소득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52
[표 13] 법인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54
[표 14]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결과 ·· 57
[표 15] SUR 회귀분석 및 각 회귀분석 결과 계수 비교 ··· 61
[표 16]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독립변수: t-1기) 결과 ····· 62
[표 17] SUR 회귀분석 및 각 회귀분석 결과(독립변수: t-1)
계수 비교 ····· 65
[표 18] SUR 회귀분석 독립변수 t기 및 t-1기 계수 비교 ·· 66

그 림 목 차

[그림 1] 법인세율 추이 ····· 22
[그림 2] 소득세율 최고세율 추이 ····· 23
[그림 3] 집권정당 변화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 32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 42
[그림 5] 소득세율 및 소득세율 차분 그래프 ····· 49
[그림 6] 법인세율 및 법인세율 차분 그래프 ····· 5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조세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한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제38조)하고,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원칙(제59조)을 명시하고 있다.[1] 따라서 조세정책은 통상 세율 등을 명시하는 세법에 대한 제·개정 형태로 진행되며, 정부에서 마련하는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제·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를 거쳐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조세와 관련된 정책 의사결정은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재정학이나 조세정책을 다루는 학문에서 대체로 세율의 결정이 개인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나 세율이 실제 어떻게 결정되며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특히 대표적인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세율결정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조세인하경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세율도 인하하였는지 여부와 집권정당의 성격, 즉 보수적인 성향의 보수정당과 진보적인 성당의 민주당계가 집권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세율의 결정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국가 간 조세인하경쟁은 한국

1)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 ① 조세개요. 3p.

의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국가 간 세율경쟁은 최근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2021년 10월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합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진행된 배경에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었다. 불필요한 조세경쟁으로 각 국의 세수기반이 붕괴되고, 조세경쟁 사이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이 나타나 세수기반 악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국제사회의 합의가 가능했다.

1980년대부터 세계화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유행 등으로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 유치나 직접투자 확보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인식하고 각국은 경쟁적으로 기업과 우수한 인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인하하며 조세인하경쟁(race to the bottom)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 국은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수요 증가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하 추세는 계속되었으며, 추가적인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금융위기를 경험하며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부각됐고,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반성의 여론과 세계적으로 안전망 확대 및 형평성 제고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안전망 구축 및 복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하였으며 그간 진행되던 경쟁적인 세율인하추세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였으나, 법인세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하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해외 자본 유입과 우수한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이러한 조세인하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계속 인하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법인

세 최고세율은 1981년 40%에서 2020년 25%로 15%p 인하되었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1981년에서 62%에서 2020년 42%로 20%p 인하되었다. 한국 역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추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인하 추세가 조세인하경쟁에 의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인하경쟁과 관련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세계화와 함께 다국적 기업들이 세 부담이 덜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어서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된다는 Gordon(1994), Tanzi(1996)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화 및 자본이동과 조세인하경쟁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Swank(2002)의 연구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Hannes Winner(2009)의 연구 등도 다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세계화시대 조세경쟁, 현실인가 신화(神話)인가"(남궁현·권혁용, 2008)와 같이 실제 조세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대체로 조세인하경쟁의 영향은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변화하는가이다. 조세인하경쟁이라는 대외적인 요인 외에 대내적으로 집권정당의 변화도 세율과 세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은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세 부담 완화와 세율 인하를 추구하고, 진보정당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충분한 재원 마련과 세율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케인지안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재정투입, 충분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높은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부터 래퍼곡선(Laffer curve) 등이 논의되며 적정 세율수준에 대한 고민과 감세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실제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 및 부시, 트럼프 정부 등은 보수주의적

성향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는 최근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당에 따른 조세정책 추진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김영삼 정부(1993~1997년)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법인세율을 적극 인하하였으며, 소득세율 또한 인하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기업 친화적인 세재 개편, 즉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처럼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비효율적인 정부개입 감소 등을 위해 세율인하 및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는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증세입장을 분명히 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추진한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2017년~2021년)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인 2012년부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2017년 대선에서도 '공정' 등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추진했다. 이처럼 민주당계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이를 위한 세부담 강화 및 재원마련, 누진적 조세체계를 통한 부의 재분배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Ripely& Franklin(1987), Swank(1988), Berry&Berry(1992), Tellier(2009) 연구 등은 대체로 조세정책은 계급 정치적 성격이 있어 보수주의적 정당의 감세론과 진보주의적 정당의 증세론의 입장차이가 분명하며, 집권정당의 이념 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다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거정치에서 유권자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국내 연구들도 당파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일관되거나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정치지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집권정당의 정치성향 차이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 과정은 다른 입법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개정안 마련시 정부안을 마련하는 행정부와 여당, 야당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율의 결정에 있어 대외적인 조세인하경쟁의 영향이나 집권정당의 변화에 따른 증세 및 감세정책 기조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세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국회 회의록, 여론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계량 분석에서 주요한 연구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조세인하경쟁, 즉 주요국의 세율 인하가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집권정당이 보수정당인지 민주당계인지 여부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81년부터 2020년 40개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조세체계이며, 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이 가는 상징성도 커서 종속변수로 삼아 연구할 가치가 있다. 관련하여 재산세는 집권정당에 따라 정책추진방향이 명확하여 연구대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책 변화 양상이 다양하고 국제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어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 부가가치세는 인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1976년 도입 이래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앞서 말했듯이 주요국의 세율 인하 추세를 나타내는 주요국 평균 세율과 집권정당이 보수정당인지 민주당계인지 여부가 주요한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국 평균 세율의 변화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의 평균세율로 한정했다. 국가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하 사례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일 것이라고 보고 위와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집권정당은 “민주당계=0”, “보수정당=1”로 하여 더미변수로 반영했다.

또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 총고정투자율을 통제변수로 삼았다. 경제성장률은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이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복지예산증가율은 재정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고, 총고정투자율은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각 변수들은 시계열 자료라 가급적 정상성(stationary) 있는 변수를 활용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각각에 대해 다중회귀분석과 이와 함께 두 종속변수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SUR 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채택했다. 다른 변수의 영향이 일정할 때 조세인하경쟁과 집권정당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SUR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다중회귀분석 및 SUR 회귀분석은 STATA 17.0을 이용해 분석했다. 이와 같이 세율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가 세율의 결정과정 및 조세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세인하경쟁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조세인하경쟁(race to the bottom)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각 국은 경쟁하며, 이 과정에서 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경쟁의 개념은 Tiebout 가설에서부터 시작한다. 주로 재정지출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Tiebout(1956)는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면 투표 등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며, 각 개인은 자유롭게 이동하여 선호에 맞는 정부를 택하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one's feet)'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 즉, 충분한 이동성이 전제된다면 개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선호를 표시하여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정지출 규모는 조세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세수준에서도 이러한 경쟁과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조세인하경쟁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동이 자유롭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각 국가의 조세제도를 따져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기업이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인하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인하경쟁은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A국가가 세율 인하를 할 경우 B국가가 세율을 유지하면 경쟁력 제고, 기업 유치 등의 효과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B국가가 세율을 함께 인하할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 없이 세수 감소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국가는 B국가가 세율인하를 할 경우에도 세율인하, 세율유지를 할 경우에도 세율인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어 세율인하가 우월전략이 된다. B국가 역시 A국가가 세율인하를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상관없이 세율인하를 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따라서 양국

2) Tiebout(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64

정부는 다 세율유지를 통해 (0, 0)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를 추구하여 (-3, -3)의 열위의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표 1] 조세인하경쟁 게임이론 예시(죄수의 딜레마)

		B국	
		세율인하	세율유지
A국	세율인하	(-3*, -3*)	(+4*, -5)
	세율유지	(-5, +4*)	(0, 0)

* 상대방의 전략에 따른 전략 선택

다만, 반복게임에서는 세율인하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약속(commitment)'을 통해 '세율유지'라는 전략을 상호 선택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최저한세율 관련 합의는 계속해서 세율 인하를 해오는 과정에서 각국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더 이상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막기 위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부분 세율인하는 진행된 상황이며, 이러한 조세인하경쟁 영향이 실재하는지 이후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세인하 경쟁과 관련하여 S.Bucovetsky(1989)는 위와 같은 게임이론을 통해 조세인하경쟁을 분석했다. 특히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의 경쟁을 비교하며, 세금 기반의 차이로 더 작은 지역에서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도출했다. 조세인하경쟁은 일어나지만 하나의 세율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며, 상이한 경제여건에 따라 수렴하는 세율이 달라진다고 본다. 게임이론을 통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는 조세인하경쟁에서 더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

Gordon 등(1994)은 국가 간 세율 차이가 있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법

3) S.Bucovetsky(2009). Asymmetric tax competi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30. issue2. pp.167-181.

인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더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편 조세수입은 적정수준으로 필요하므로 이동성이 떨어지는 개인 기반의 소득세나 소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4] 일률적인 조세인하경쟁이 아니라 세목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으며,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소득세율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nzi(1996)는 세계화는 조세경쟁을 심화시켰으며 다국적 기업 등은 세율이 낮고 세부담이 덜한 곳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쟁으로 각 국은 낮은 조세수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발생하며, 특히 세수에 대한 영향은 불충분하지만 조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고 본다.[5] 세부담은 세율 이외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세율이 가장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요인이기는 하다. 본 연구는 세율에 집중하여 살펴볼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보완적으로 세수에 대한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wank(2002)는 국제적인 자본이동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세계화로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쳐 재정소요가 확대되어 더 많은 세수확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세계화는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 노동과 소비로 조세부담의 이동, GDP 대비 조세비중의 감소 등과 체계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화와 함께 명목적인 세율인하추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세수기반을 유지하는 등 단순히 조세인하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제시한다.[6] 이처럼 조세인하경쟁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입장도 있다.

---

4) R.H.Gordon and J.K.Mackie-Mason(1994). Why is there corporate tax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role of transfer pricing and income shifting. Cambridge.

5) Tanzi(1996).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uture of Tax System. IMF Working Paper.

Hannes Winner(2009)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조세 경쟁 이론의 대부분이 각 국가 조세 정책의 융합을 예상하고 있으나, 국가 간 조세체계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자본과세가 바닥까지 가는 경쟁을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한다.[7] 어느 정도 조세인하경쟁은 나타나지만 완전히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의 제한과 그 하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Devereux&Loretz(2013)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인하경쟁은 실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대규모 국가들이 조세인하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기존 견해와 달리 경쟁의 양상에 따라 소규모 국가들이 조세인하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순히 세율 인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매력적인 입지로서 다양한 조건들도 함께 경쟁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8] 세율인하가 대표적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밖에 다른 요인들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자본의 이동과 관련해서 조세경쟁 문제를 접근하였으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실제 세율 인하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조세인하경쟁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조세인하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연구들도 다수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계에 부딪치고, 조세인하경쟁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온 연구방향이 다소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

6) Swank, Duane(2002).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Hannes Winner(2009). Why is there no race to the bottom in capital taxation?. 2009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9. pp.761-786
8) Devereux&Loretz(2013). What do we know about corporate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chicago vol.66, Iss.3 pp.745-773

국내에서도 세계화와 관련해서 조세인하경쟁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됐다. 김미경(2006)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들 사이의 조세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 아니며, 명목세율의 인하가 나타나고 있지만 조세부담 감소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분석한다. 또한,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조세부담 이전도 경험적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한다.[9] 명목적으로는 조세인하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직접세에서 세수 강화와 감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남궁현·권혁용(2008)은 세계화가 조세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의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자본유동성은 자본의 조세부담률에 체계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 반면 무역의존도는 자본의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바닥으로의 경쟁(down to the bottom)은 검증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세계화 변수 이외에 정부의 당파성, 노조조직률 등 특성도 조세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10] 즉 세계화는 중요한 변수지만 정부는 단순히 이를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며 국내 정치적, 정책적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신상화·김상현(2016)은 OECD 국가들 중 이질적 노동시장하에서 조세경쟁과 동질적 노동시장하에서 조세경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노동시장 효율성 및 무역비용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법인세율의 차등이 가능하며, 경제여건이 상이하므로 무한히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11] 해외의 연구사례와 마찬가지로 조세인하경쟁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여건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밝힌다.

---

9) 김미경(2006). 세계화, 조세경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배갈등구조. 아세아연구 제49권 3호 p.7-43

10) 남궁현·권혁용(2008). 세계화시대 조세경쟁, 현실인가 신화(神話)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42. pp.333-358

11) 신상화·김상현(2016). 불완전 노동시장하에서의 국가간 조세경쟁 모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2020)은 67개 국가의 조세인하 경쟁을 분석하여 세율경쟁이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세 경쟁은 법인세 경쟁보다 치열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소득세 인하는 법인세 인하와 달리 정부지출 및 정부부채, 형평성에 대한 고려 등이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12] 세목별로 일관되게 인하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밖의 고려요인들도 살펴봐야 함을 제시한다.

한편 세율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승래·류덕현(2010)은 법인세 감세의 전달경로와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 2008년~2012년 기간에 5%p 규모의 법인세 감세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감세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세 이후 재정건전성 관리에 따라 장기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13]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세율인하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연구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는 대체로 조세인하경쟁과 한국의 조세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세인하경쟁이 한국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결정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며, 국내의 경제적,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감세론과 증세론 관련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재건사업 등을 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을 유지하던 와중에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감세론이 본격적으로 논의

12) 이영(2020). Competition in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 Evidence from 67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36, pp.101-133.
13) 김승래·류덕현(2010).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한국조세연구원.

되기 시작했다. 래퍼(Laffer)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을 제시하며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세수가 많아지지만 일정 수준의 최적의 세율을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근로의욕 상실,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적정한 세율수준에 대해 고민하게 했으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레이건 정부는 시장경제의 불필요한 개입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래퍼곡선은 세율 인하의 근거로 활용되어 레이건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Economic Recovery Tax Act(ERTA)를 마련하였다.[14]

국제 조세경쟁 이론에 따르면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하였고, 자본과 노동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자본과 노동의 유출을 막고 해외에서 자본 및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15] 소득세 부담은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 효율화를 위한 감세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조세경쟁의 측면에서도 감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2000년대 후반 각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불평등 및 격차 완화, 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복지재정을 충분히 확충하기 위해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단순히 재정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구조를 보다 누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 됐다. 특히 부캐넌(M.Buchanan)의 말대로 민주주의 선거에서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14) Arthur B.Laffer(2009), President Ronald Reagan's initial actions project.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staff

15) 박현석(2016),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책: 국회-행정부 관계와 조세 정치.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p.120

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려 하는 결과 적자 민주주의(democracy in deficit)[16]가 계속되다 보니 재원은 부족하고 증세가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 증세론은 더욱 힘을 얻는다.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세가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증세론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더욱 강조됐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개선이 전제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의 분배 및 형평성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보는 성장론이다.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법인세 강화, 재산세 강화 등을 통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성장론이다.

감세론과 증세론은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통상 보수주의적 성향은 감세를 추구하고 진보주의적 성향은 증세를 추구한다고 본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효율성이 강조되고 성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성장이 우선 이뤄지면 낙수효과로 분배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효율적으로 경제가 운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왜곡을 초래하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대신 넓은 세원을 추구하며 감세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조세제도는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분배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된다고 본다.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분배가 우선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분수효과가 나

16) James M.Buchanan and Richard E.Wagenr(1977),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ard keynes. Academic press.

타나 분배가 성장도 견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제도 자체가 분배 및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있도록 누진성을 가져야 하며, 직접세를 보다 선호하며, 여러 방면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선호하므로 충분한 세수 확보를 추구한다.

[표 2] 감세론(보수주의적 성향)과 증세론(진보주의적 성향) 비교

	감세론(보수주의적 성향)	증세론(진보주의적 성향)
조세의 기능	효율성 강조, 성장 기반	형평성 제고, 소득분배
성장-분배 관점	낙수효과 성장 → 분배	분수효과 분배 → 성장
조세 구성	간접세 선호	직접세 선호
조세 구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누진과세 강화
조세부담률	일정수준 유지	조세부담률 제고
국가관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 (작은정부)	국가의 적극적 개입 (복지국가)

감세론과 증세론, 정치적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 등과 관련하여 주로 조세정책보다는 복지정책이나 정부규모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조세와 관련된 연구도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다. Ripely& Franklin(1987)은 의회와 행정부 등 주요 행위자 간의 정치적 관계를 살펴보며, 조세정책의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의 성격이 강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념갈등이 주요한 이슈가 됨을 밝히고 있다. 즉, 조세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재분배 이슈를 둘러싼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의 입장 차이가 있는 계급 대립적 성격의 정책결정이라고 분석한다.[17] 이러한 분석처럼 한국에서도 조세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계급 대립적 성격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17) Ripley, Randall B. and Grace A. Franklin. (1987).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Pacific Grove. The Dorsey Press

Swank(1988)는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정책 입안자의 이념적 선호, 정치적 환경의 변화, 구성원의 선호 등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조나 하층 계급의 구성원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하며, 좌파 및 우파의 집권여부에 따라 정책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했다.[18]

Berry&Berry(1992)는 집권정당은 선거경쟁 및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에 증세를 선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지만 선거에서의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19] 이념의 차이를 떠나 선거경쟁을 앞두고는 증세는 보수정당, 진보정당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Tellier(2009)는 캐나다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부 수입의 출처, 즉 세원을 분석하여 정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집권여당의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20] 우파 정당이 권력을 잡을 때 세금 수입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했고 가설이 완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들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들은 대체로 조세정책의 문제는 계급 정치적 성격이 있어 감세 및 증세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정당도 이러한 정책 성격에 맞게 행동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진보주의적 성향의 정당은 증세를, 보수주의

---

18) Duane H. Swank(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Domestic Expenditure in the Affluent Democracies. 19, Marquette University

19) Frances Stokes Berry, William D. Berry(1992). Tax innovation in the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6, pp.715-742

20) Genevieve Tellier(2009). Les déterminants des recettes fiscales des gouvernements provinciaux canadiens : une étude empirique,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52, pp.591-612

적 성향의 감세를 추구하기는 하나 결국은 경제 환경이나 선거 정치에서 지지자의 선호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진영·이창구(2011)는 조세정책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기조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연도별 세제개편 내용을 대상으로 보수주의적 정당과 진보주의적 정당이 각 집권하는 시기의 조세정책을 분석했다.[21] 대체로 이념과 조세정책 간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보수정권에서 감세현상이 두드러지고,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진보정권에서 조세 형평적 세제조치가 보다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다만, 이념이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임이 분명하나 항상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권혁용·김항기(2015)는 16개 국가의 전체세입과 GDP 대비 소득세입의 증감이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동학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정부당파성은 선거제도의 형태와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며, 따라서 당파성이 조세정책 등에서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밝혔다.[22] 좌파정당은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득세입을 늘려 중위투표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며, 우파정당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박현석(2014)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국제경쟁 심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여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감세론자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중심의 감세론 지지 세력과 복지 친화적인 민주당계 중심의 증세론 지지 세력의 정치적 논쟁

21) 김진영·이창구(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4호

22) 권혁용·김항기(2015),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3호 pp.119-151.

의 결과로 본다.[23] 국회에서의 협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법인세율은 개방화 이후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법인세율 인하는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현석(2016)은 또한 소득세율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사실상 철회된 점을 연구했다.[24]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가의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 추세보다는 행정부와 국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 국내정치적 결과로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회 주요 행위자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양극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본다. 세계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특수한 경제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당파성에 따른 설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소득세 정책에 있어 행정부보다 국회 우위의 정책결정이 이뤄짐을 확인했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의의와 한계

조세인하경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세계화, 자본의 이동과 관련해서 조세경쟁 문제를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는 조세인하경쟁에 대한 연구가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연구와 제한적이라는 연구 등 다양한 결론으로 이어졌으나, 국내 연구는 대체로 조세인하경쟁과 한국의 조세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조세인하경쟁에는 공감하나 그 영향의 정

---

23) 박현석(2014). 국제 조세인하경쟁과 자본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집 1호. pp.227-246
24) 박현석(2016). pp.117-149.

도에 대해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실제 조세인하경쟁이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도 조세인하경쟁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통상 조세인하경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기업이나 자본의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강조되는 세목이기에 당연한 관심이기는 하나, 조세인하경쟁이 법인세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도 함께 살펴본다면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결정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변화에 따른 감세론 및 증세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조세정책의 문제는 계급 정치적 성격이 있어 선거 등을 두고 감세론과 증세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이념적 차이가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으로 보수주의 성향과 진보주의 성향의 정도에 따라, 특히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지형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그간 증세론과 감세론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재정지출 등 정부지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세수 확보나 세율 결정의 문제는 지출에 맞춰 변화하는 것으로 부차적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고려하기는 하나 조세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세율결정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히 바로 계량분석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주요 요소를 우선 살펴본 후 계량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변화

제 1 절 주요국의 법인세율·소득세율 변화 추이

주요국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OECD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을 1998년 32%에서 2003년 12.5%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자본 유입으로 투자가 활발해졌으나 투기 자본 유입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졌다. 결국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는 위기까지 몰린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그 실험의 효과가 커 상징적이지만, 평균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사례로 이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대외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5개국을 중심으로 세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86년~1988년 2년간 46%에서 34%로 인하하였고 1993년 35%로 소폭 인상한 이후 법인세율을 꽤 오랜 기간 일정하게 유지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급격하게 인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경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됐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다시 법인세율 인상을 준비하며 투자재원 마련 및 소득 불평등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에 앞서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했다. 1984년~1986년 3년에 걸쳐 5%p씩 인하하여 50%에서 35%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인하 노력이 이어져 현재 19%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조금 늦은 1990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하였고, 독일 역시 꾸준히 인하해오며 현재 15.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쟁국인 일본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며 아베 총리 집권이후 23.4%로 인하하였고, 현재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하추세이기는 하지만 인하와

인상을 반복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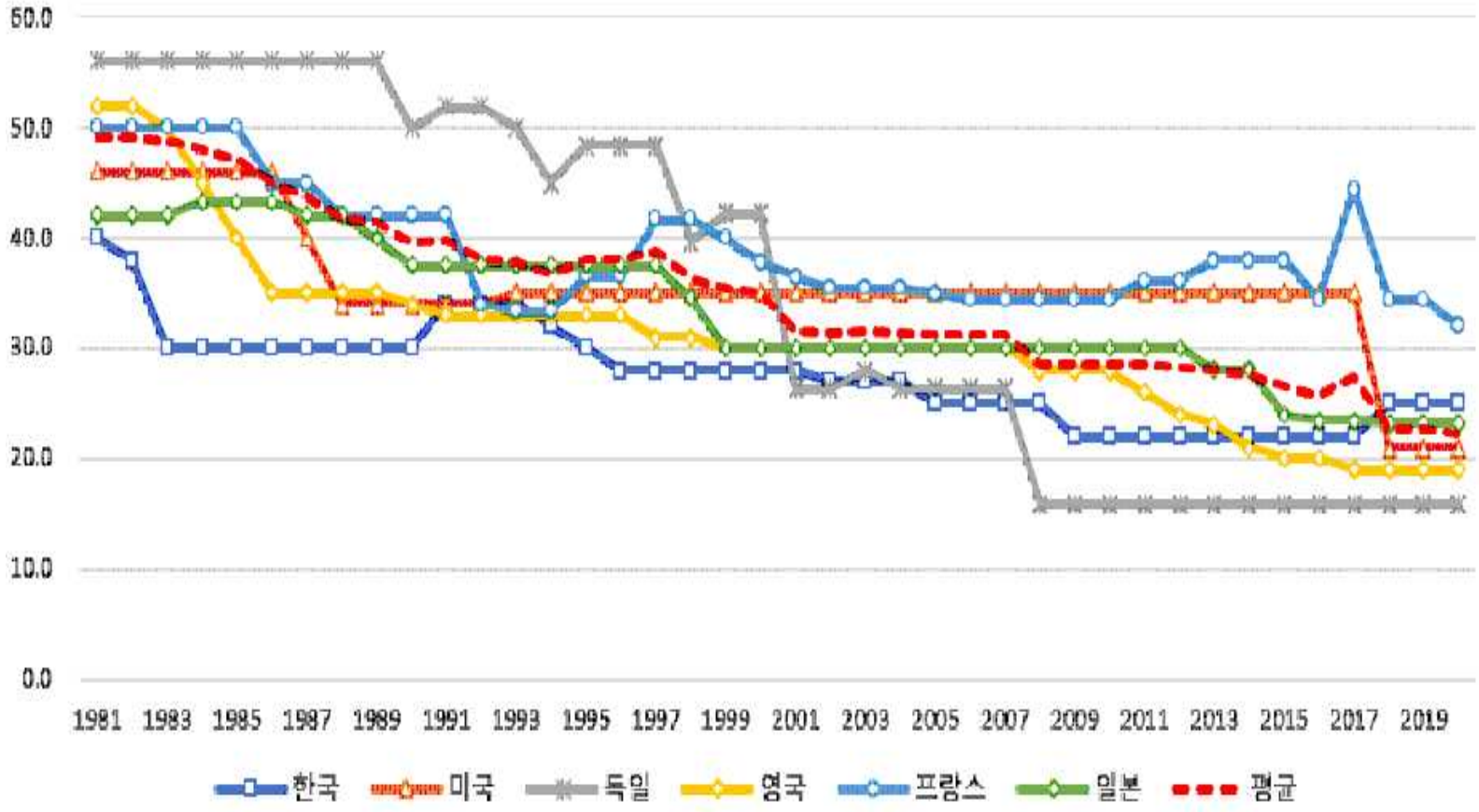
한국도 대외 개방과 함께 이러한 조세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세계화와 경쟁압력으로 법인세율 인하 기조는 계속됐다. 다만, 한국은 특이하게도 2017년 트럼프 대통령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세에도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서 다소 벗어났으며, 현재도 25%로 2022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21.2%를 넘어선다.

소득세율 역시 법인세율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 기조에 맞춰 전반적으로 인하추세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1986년~1988년 2년에 걸쳐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8%까지 인하했다. 영국, 프랑스 등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소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했지만 소득세 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어 미국만큼 인하하지는 않았다. 독일은 법인세율 인하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 소득세율 인하 추세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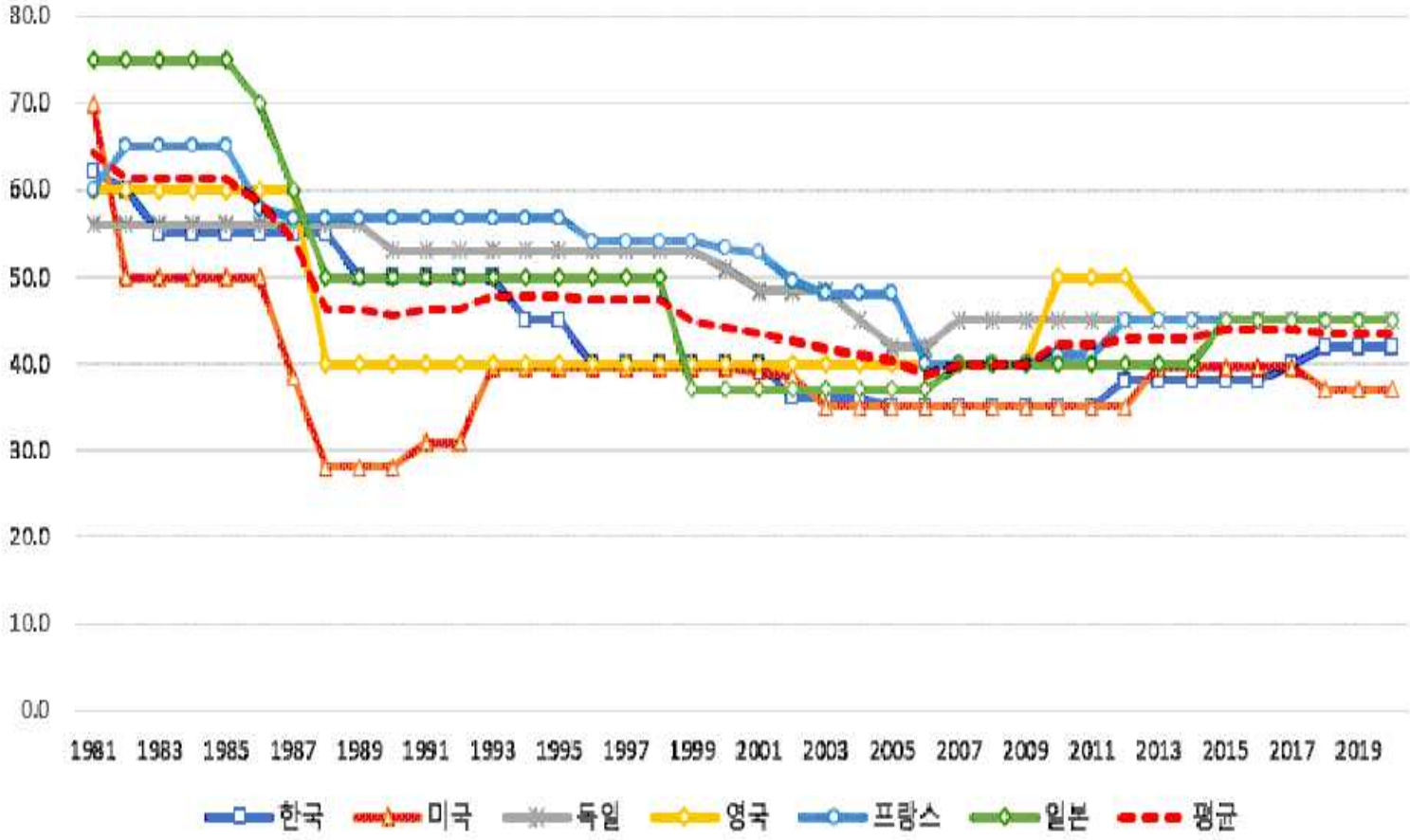
소득세율은 법인세율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세율 인상으로 최고세율은 유지 또는 인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국에서 버핏세(Buffett rule) 도입 추진 등 '부유세' 논쟁과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최고 소득세율 인상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이명박 정부까지 인하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소득세율 인상을 위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19년 한국의 소득세수 비중은 총 조세 대비 24.9%로 OECD 국가 평균인 32.9%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법인세율 추이(단일세율이 아닐 경우 최고세율)



<그림> 소득세율 최고세율 추이



제 2 절 한국의 정권별 법인세율·소득세율 변화 추이

외국에서의 감세 및 증세논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보수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와 시장을 중시하며, 감세를 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계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며, 증세를 추구해 왔다. 정권별 집권정당에 따른 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보수정당)

전두환 정부는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전두환 정부는 고도성장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을 잠재우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재정긴축을 사용하였으며, 세출 억제로 인해 세입 확충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세부담 완화의 부담이 덜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했다.[25]

한편 노태우 정부는 외환 및 금리자유화 등 자유화와 개방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민주화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복지 확대요구와 형평성 제고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충분한 세수확충이 필요했다.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되는 추세였으나 노태우 정부에서 1991년 법인세율을 30%에서 34%로 인상한 바 있다.[26]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세계화의 흐름에서 경쟁하기 위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34%에서 28%로 6%p 인하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p 인하됐다.

---

25) 한국조세연구원(2012). 한국세제사 제1편. p.431.
26) 한국조세연구원(2012). 한국세제사 제1편. p.432.

이처럼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대체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당계)

민주당계의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감세정책을 펼쳤다. 특히 2001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종전 40%에서 36%로 4%p 인하했다. 법인세율의 경우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법인세율 2%p 인하를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갈등이 있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경기침체 상황으로 법인세를 인하해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율인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펼쳤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쟁 끝에 법인세율은 28%에서 27%로 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27]

IMF 위기가 일단락되면서 여전히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소요가 계속 있는 한편, 일부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생겼다. 그러나 다음 해 대선을 앞둔 정권 말의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였고,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랐다. 따라서 타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 폭을 줄여서 수정 처리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표 16] 김대중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개정과정	주요내용
2001년 (집권 4년차)	▪ <정부안> 소득세 최고세율 4%p 인하 ▪ <한나라당 의원안> 법인세 최고세율 2%p 인하 ▪ <정기국회> 소득세율 정부안 대로 의결, 법인세율 1%p 인하로 수정 의결

27) 제226회 국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2001.12.21.)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권 초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조율되지 않은 의견으로 논의가 무산된 바 있었으며, 한나라당은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1~2%p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논쟁이 나타났다.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세를 고려하여 대체로 정부와 여야 모두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었다.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율 인하가 주로 쟁점이 되고 인하시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결국 정기국회에서 2005년부터 과표별로 2%p 인하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04년에 침체 국면에 있는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세율을 과표별로 1%p 인하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6%에서 35%로 인하됐다. 재정적자 및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새천년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반대가 일부 있었으나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는 전반적으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추세는 이어진 한편 세수기반 확대 및 재산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은 증가했다.

[표 4] 노무현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개정과정	주요내용
2003년 (집권 1년차)	▪ **<한나라당 의원안>** 법인세율 구간별 2%p 인하 (최고세율 27%→25%) ▪ **<정기국회>** 2005년부터 법인세율 구간별 2%p 인하 합의
2004년 (집권 2년차)	▪ **<정부안>** 소득세율 구간별 1%p 인하(최고세율 36%→35%) ▪ **<한나라당 의원안>** 소득세율 구간별 3%p 인하 ▪ **<정기국회>** 정부안대로 구간별 1%p 인하 합의

3. 이명박·박근혜 정부(보수정당)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 친기업적 경제정책 공약과 함께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감면, 소득세율 인하 등 12.6조원 규모의 감세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집권 1년차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99석 중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하고, 범보수계열은 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을 포함하면 200여석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통합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이 시작되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시작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입법 등에서 상당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다.

집권 1년차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 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하 외자유치 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구간별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다. 최경환 조세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세경쟁의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이뤄졌으며, 야당인 민주당의 큰 반대 없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2009년에 여당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2009.9.1.)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유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소득세율·법인세율 유예가 다수의견으로 합의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으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상황에서도 여대야소의 집권여당은 감세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못했다.

집권 4년차인 2011년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를 유보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과표 2억~500억원 중간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20%로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버핏세(Buffett tax) 논의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결국 3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법인세 인상 보다는 소득세 인상이 정치적 부담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부터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국외에서도 소득세율 인상 등이 검토됨에 따라 여대야소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세율 인상을 합의하는 등 정권 말에는 감세정책이 유보 또는 철회된 모습이 나타났다.

[표 5] 이명박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개정과정	주요내용
2008년 (집권 1년차)	▪ **<6월 정부안>** 조속한 감세 추진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발표 - (과표 1억원 초과 → 과표 2억원 초과) 25% → 22% → 20% - (과표 1억원 이하 → 과표 2억원 이하) 13% → 11% → 10% ▪ **<9월 정부안>**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 8~35% → 6~33%, 2009년 1%p, 2010년 1%p 인하 ▪ **<정기국회>** 2008.12.12. 정부안대로 본회의 가결
2009년 (집권 2년차)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안>**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해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 ▪ **<정기국회>**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유보 결정
2011년 (집권 4년차)	▪ **<한나라당 당론 결정>**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 유보 ▪ **<정부안>** 법인세율 중간구간 신설·인하, 소득세율 유지 - (법인세율) 과표 500억원 이상 최고세율 22%는 유지하되, 2억~500억원 중간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20%로 인하 - (소득세율) 최고세율 현행 35% 유지 ▪ **<정기국회>** 한나라당 안으로 소득세율 인상 결정 - (민주통합당) 과표 2억원 초과 소득세율 38% 적용 제시 - (한나라당) 과표 3억원 초과 소득세율 38% 적용 수정안 제시 → 표결로 통과시킴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추구하며, 복지지출 증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발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지 않았다. 실제 명목적인 세율인상은 없었으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없었으나,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여 사실상 중간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진행하는 형태가 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정권 초 여야 의석수가 유사한 상황에서 증세정책이 일부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28]

다만, 집권 4년차인 2016년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상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면서 소득세율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적정부담과 적정 복지국가를 나가기 위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적극 논의하여 추진했다.[29] 여당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야당은 증세를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절충안으로 소득세율을 2%p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동결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

[표 6] 박근혜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개정과정	주요내용
2016년 (집권 4년차)	▪ <정부안> 소득세율·법인세율 관련하여 정부안 없음 ▪ <정기국회> 여야 3당 합의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소득세율 40%를 적용하기로 결정

28) 제321회 국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2014.1.1.)
29) 제346회 국회본회의 제15차 회의록(2016.12.2.)

4. 문재인 정부(민주당계)

민주당계인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를 추구했다. 양극화 해소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증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조세저항 등을 우려하여 보편 증세보다는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의 소득세 및 상속세 부담 강화, 충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이를 위한 세부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경계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

집권 1년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세수 확대가 필요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과세형평 제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 뒷받침 등을 위해 소득세율은 과표 5억원 초과시 42%, 법인세율은 과표 2,000억원 초과시 25%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였으나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부담이 되는 ‘핀셋 증세’로 조세저항이 덜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세율인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집권 2년차와 집권 3년차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차례 인상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어려웠으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나갔다. 다만 대외적으로 세부담 강화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OECD에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은 세

계적인 법인세 감세 경쟁 시기에 이뤄졌으며,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으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 등 다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언했다.[30] 또한, Laffer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세수기반을 넓히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31]

집권 4년차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의 뒤를 이은 미래통합당이 84석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며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다. 정부는 그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특별한 반대 없이 투표에서 274인 찬성 236인으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증세정책을 성공적으로 입법·추진할 수 있었다.

[표 7] 문재인 정부 소득세율, 법인세율 결정

개정과정	주요내용
2017년 (집권 1년차)	▪ <정부안>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최고구간 신설) - (소득세율) 과표 5억원 초과시 42% 세율 적용 - (법인세율) 과표 2,000억원 초과시 25% 세율 적용 ▪ <정기국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로 불참한 가운데 정부안대로 본회의 가결
2020년 (집권 4년차)	▪ <정부안>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10억 원 초과구간 신설하고 45% 세율 적용 ▪ <정기국회> 일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정부안에 대해 274인 중 236인 찬성으로 사실상 합의

30) 연합뉴스(2018.6.20.) 민경락 기자. "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31) 한국경제(2019.1.2.). 김현석 기자. "래퍼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그림 3] 집권정당 변화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 집권정당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집권정당	보수정당	민주당계	소득세율	법인세율
전두환 정부	1981	민주정의당 (여대야소)	민주정의당	* 정당활동 제한	62	40
	1982				60	38
	1983				55	30
	1984				55	30
	1985			신한민주당	55	30
	1986				55	30
	1987				55	30
노태우 정부	1988	민주정의당 (여소야대)		평화민주당	55	30
	1989				50	30
	1990	민주자유당 (여대야소)	민주자유당		50	30
	1991				50	34
	1992	민주자유당 (여대야소)		민주당	50	34
김영삼 정부	1993				50	34
	1994				45	32
	1995				45	30
	1996	신한국당 (여야유사)	신한국당		40	28
	1997				40	28
김대중 정부	1998	새정치국민회의 (여소야대)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40	28
	1999				40	28
	2000	새천년민주당 (여야유사)		새천년민주당	40	28
	2001				40	28
	2002				36	27
노무현 정부	2003	열린우리당 (여대야소)		열린우리당 / 민주당	36	27
	2004				36	27
	2005	열린우리당 (여소야대)			35	25
	2006				35	25
	2007				35	25
이명박 정부	2008	한나라당 (여대야소)		통합민주당	35	25
	2009				35	22
	2010				35	22
	2011				35	22
	2012	새누리당 (여야유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38	22
박근혜 정부	2013				38	22
	2014			새정치민주연합	38	22
	2015				38	22
	2016				38	22
문재인 정부	2017	더불어민주당 (여야유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40	22
	2018				42	25
	2019				42	25
	2020	더불어민주당 (여대야소)	국민의힘		42	25
	2021				45	25

제 3 절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세율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인상 및 인하의 근거로 제시되는 요인들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계량분석에서 주요 연구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국가 간 조세경쟁

국가 간 조세경쟁은 세율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세정비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그밖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정부는 법안 및 청원 심사소위원회에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관련해서 중국 및 일본과의 투자유치 경쟁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했다. 세수부족분 등을 고려하여 공제제도 축소도 함께 고려했다.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전제에서 투자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율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32]

또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결정 과정을 보면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집권 1년차 여당과 정부는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경쟁국의 세율인하 추이까지 적극 고려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2000년 이후 8년간 OECD 국가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율이 4.5%p에 달해 한국도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경환 조세소위위원장은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측면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주는 상징성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하자고 한 반면,

32) 제243회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 제11차 회의록(2003.11.20.)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0→45%) 결정을 이유로 소득세율 인하에 반대하기도 했다. 국가 간 조세경쟁이 한국의 세율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3]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는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득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을 하회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들었다. 법인세율은 대외적으로 인하추세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고 인상하기에 부담이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은 인하추세가 꺾이고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도 소득세율 인상 결정을 하는데 용이하며 부담이 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조세경쟁이 국내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증세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간 조세경쟁은 주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였다. 여전히 OECD 국가 등에서 법인세 중심으로 세율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초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세우며 출범했다. 세율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OECD 평균 세율에 비해 낮은 상황을 언급하고, 세율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OECD 국가들의 세율 인하 추세가 계속됨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면서 법인세 인하추세는 계속됐으나, 소득세율은 국제적인 인하추세가 완화되는 등 대외적인 요인이 불분명해지자 증세론이 보다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 간 조세경쟁은 국내 세율결정에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국제적인 조세인하 추세에서는 자본 및 투자유치, 인재유입 등을 위해 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생기며, 국제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추세에서는 경쟁관계에서 그만큼 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생겨 세수마련 등을 위해 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33) 국회 조세소위원회 제10차 회의록(2008.11.28.)

2. 집권정당의 정치적 성격

앞서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당은 감세를 추진하고, 진보주의적 성향의 정당은 증세를 추진한다고 검토하였는데, 실제 세율을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성향이 드러나고, 집권정당 여부 및 정치지형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특히 공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정부'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새천년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세금을 잘 걷어 적재적소에 쓰겠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차 범보수계열이 약 200여석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여대야소 정국으로 시작했으며,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개인 및 기업의 감세에 대한 요구라고 보고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2008년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었는데 여당의원들은 그럴수록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 인하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이었으며,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하 추세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재정투입 확대에 대비해 세율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주당은 세율인상 등 세수 확대를 위해 점차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하까지 유예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양

극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결국 감세정책은 유보됐다.

한편, 반대로 증세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를 살펴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세 강화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증세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 세제감면 정비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증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한편 범보수계열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중부담 중복지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와 달리 증세가 주요한 공약으로 다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정책을 추진하되 특히, 초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핀셋 증세' 형태로 조세저항을 줄였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민적 지지가 있는 상황이라 정치적 부담을 덜고 강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겸(2021)은 대개 증세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상을 정치적 소수계층으로 한정함으로써 비교적 약한 조세저항만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34]

특히, 집권 4년차에도 적극적으로 증세정책을 추진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입법 등의 추진력을 얻었기에 추가적인 증세정책이 가능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환경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충분한 재정확보 필요성 등으로 보수정당은 감세 주장을 적극 펼치기 어려웠으며, 핀셋 증세에 대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정도였다.

---

34) 김상겸(2021).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의 모색. 산업연구 45권 2호. p.66.

대표적으로 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보수정당은 감세를 추진하며, 민주당계는 증세를 추진하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집권정당에 따라 세율 변동 논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대야소 등 정치지형의 변화나 국민의 지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양태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입장과 대결구도도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경제상황 및 재정건전성 등

경제상황이나 재정건전성도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율인하 요구에 직면한다. 한편으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율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가 나타나며,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당장의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세율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제정책의 자율성이 일부 상실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세율 인하 추세에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상당기간 유지됐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차에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08년 결정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35]를 유보하고 재

35) 2008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25% → 22% → 20%) 및 소득세율 인하 (8~35% → 6~33%, 구간별 2009년 1%p, 2010년 1%p 인하) 결정

정을 충실히 하자는 의견을 펼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감세정책 철회 문제가 논의됐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감세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율·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감세정책 유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으로 소득세율·법인세율 유예가 다수의견으로 합의되었다. 집권 초 여대야소인 상황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실제 세율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에 대한 수요도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말했듯이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이후 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로 평균 복지예산증가율은 25.4%였으며, 1981년~2020년 평균 복지예산증가율인 16.0%에 비해 높았다.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세수확보를 위해 세율이 인상되거나 인하폭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직접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있는 시기에 복지예산증가율이 높아지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 세율도 유지되거나 인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의 투자 정도도 세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법인세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데 부담이 덜하나,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고려한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상황, 재정건전성, 복지수요, 투자정도 등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제 4 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세율변화와 집권정당의 당파성 등에 따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율의 변화는 특히 증세 및 감세 등의 조세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세목은 소득세 및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인상 논의에도 불구하고 1976년 도입 이래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율인하경쟁 및 집권정당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세수확보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정치적인 논쟁이 치열하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연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집중하여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 구조를 가진다. 즉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다. 조세체계가 틀을 갖춘 이후로는 주로 세율 결정과 관련된 논의는 과표 최고구간의 세율에 대해 이뤄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최고구간의 세율, 즉 최고세율을 종속변수로 삼고자 한다.

2. 독립변수 :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조세인하경쟁을 고려할 때 외국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는 한국의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율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소득세율 변화와 법인세율 변화를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한 독립변수로 삼았다.

다만, 모든 국가나 OECD 국가의 세율 변화를 변수로 삼기보다는 주요 국가들의 평균 세율 변화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정책 결정시 참고로 하는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을 주요 국가들로 보고 평균 세율 변화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주요국을 OECD 가입국 등으로 넓힐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율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등 실제 정책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여 분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의 세율변화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도 세율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즉, 주요국들이 세율을 인하할 경우 한국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해외 자본 및 우수한 인적 자원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한편 주요국들이 세율을 인상할 경우 한국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의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외 경제적이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변화는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2) 집권정당이 보수정당인지 민주당계인지 여부

집권정당이 보수정당인지 민주당계인지 여부에 따른 세율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보수정당일 경우에는 1, 민주당계일 경우에는 0을 더미변수로

삼아 독립변수로 반영했다. 정치지형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의지 및 행정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토했듯이 통상 보수정당은 세율인하 및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보수정당은 직접세 보다 간접세를 선호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이라고 보며, 재분배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한편, 민주당계는 간접세 보다 직접세를 선호하며 조세정책 자체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 및 이념의 차이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 밖의 변수 : 통제변수

그 밖에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삼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세부담을 늘릴 여력이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장이 저조한 시기에는 소비 여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세율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세율은 재정상태나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그 값이 클수록 세율인상의 압박이 생기고, 작을수록 세율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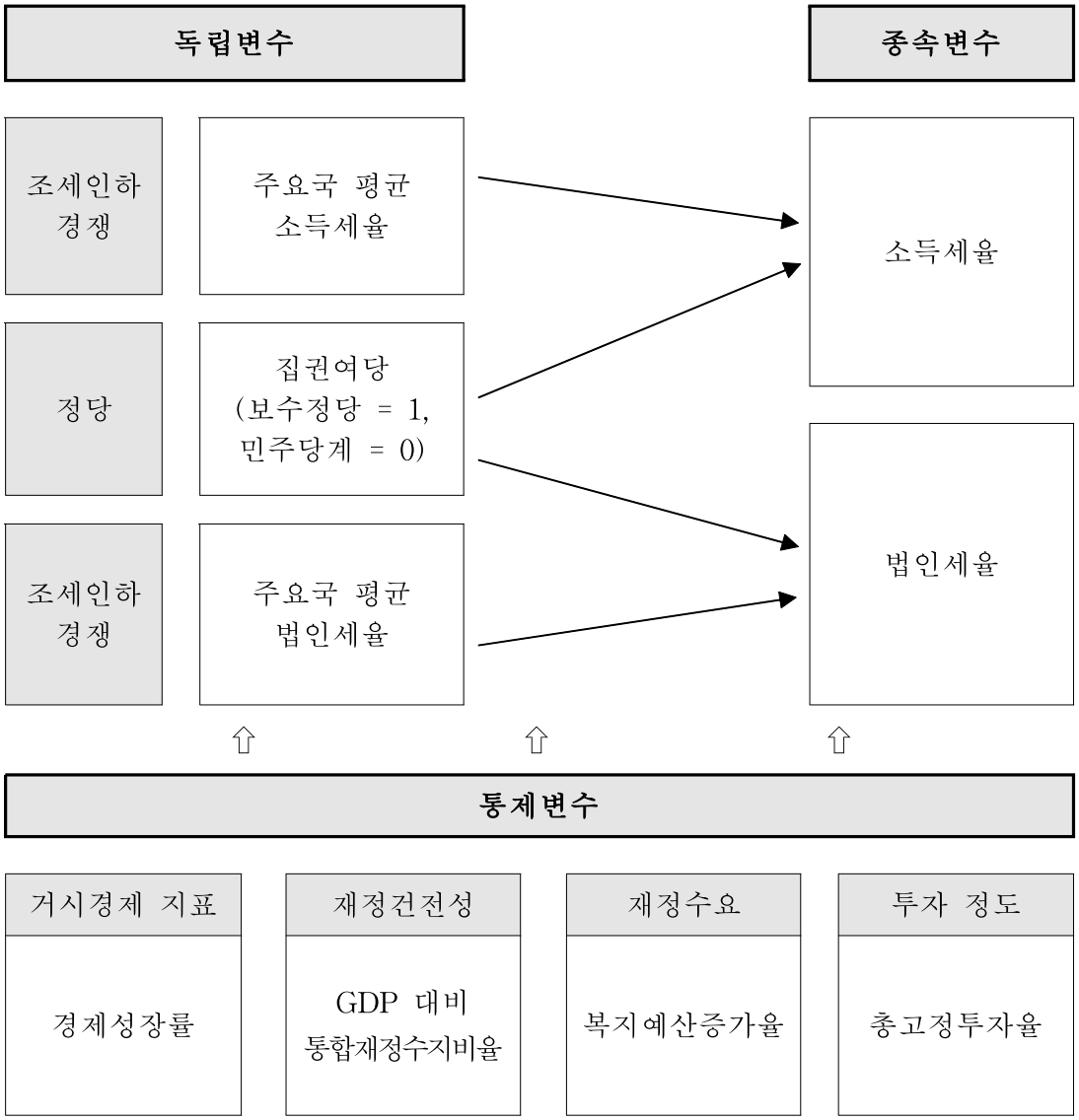
한편 소득세는 분배문제와 관련이 있는 바, 복지예산증가율이 증가하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누진성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증가율을 소득세율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했다. 또한, 총고정투자율은 투자와 관련된 지표로 국가의 투자여력이나 성장 잠재성을 의미하며 법인세율과 관련이 있어 법인세율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종속변수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에 대해 주요 관심변수를 독립변수로 보고, 그 밖의 거시경제지표, 재정건전성, 재정수요, 국가의 투자 정도를 통제변수로 반영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 t : 1981~2020년(40년)



제 3 절 연구 가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은 세부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이며 세율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정책이다. 그럼에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재하다.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세율 결정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조세인하경쟁가설 :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X_{\text{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조세인하경쟁)}} \rightarrow Y_{\text{한국 소득세율}}$

$X_{\text{주요국 평균 법인세율(조세인하경쟁)}} \rightarrow Y_{\text{한국 법인세율}}$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세율인하가 나타났다. 소득세율의 경우 우수한 인재 유입 및 근로의욕 고취,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율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유인 확대 등을 위해 경쟁적인 세율인하가 나타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도 기업과 인재의 유치 등을 위해서 조세인하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에서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가 나타났을 것이다. 즉, 주요국의 세율 변화는 한국의 세율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국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으로 한정하여 살펴봤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살펴보며,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경향 속에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한국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당세율변동가설 :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X_{\text{집권정당(보수정당=1, 민주당계=0)}} \rightarrow Y_{\text{한국 소득세율}}$

$X_{\text{집권정당(보수정당=1, 민주당계=0)}} \rightarrow Y_{\text{한국 법인세율}}$

일반적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은 낮은 세율 및 감세정책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및 기업의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하며, 민주당계는 충분한 세원마련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및 재분배를 강조하므로 세원 마련을 위한 세율인상 및 증세정책을 추진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각 집권정당이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였다면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민주당계가 집권하는 시기에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실제 집권정당 정치적 성격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지형에 따른 변화, 즉, 여대야소, 여야유사, 여소야대의 상황에 따라 세율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집권연차에 따라 영향이 상이한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관측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서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하게 집권정당이 민주당계인지 보수정당인지 여부만 더미변수로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 4 절 분석모형 및 자료수집

1. 소득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Y_{소득세율} = \beta_0 + \beta_1 X_{주요국평균소득세율} + \beta_2 X_{집권여당(보수=1)} + \beta_3 X_{경제성장률} + \beta_4 X_{재정수지비율} + \beta_5 X_{복지예산증가율}$$

Y : 종속변수 - 한국 소득세율

X : 독립변수 -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집권여당(보수정당=1),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

위 회귀식은 소득세율에 대해 두 가지 연구가설, 즉 "(조세인하경쟁가설)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정당세율변동가설)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이다.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변수는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과 집권여당의 변화(보수정당, 민주당계)에 따른 소득세율 변화로 독립변수로 반영하였으며, 다른 독립변수인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2.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Y_{법인세율} = \beta_0 + \beta_1 X_{주요국평균법인세율} + \beta_2 X_{집권여당(보수=1)} + \beta_3 X_{경제성장률} + \beta_4 X_{재정수지비율} + \beta_6 X_{총고정투자율}$$

Y : 종속변수 - 한국 법인세율

X : 독립변수 -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집권여당(보수정당=1),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총고정투자율

위 회귀식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 역시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이다.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변수는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과 집권여당의 변화에 따른 법인세율의 변화로 독립변수로 반영하였으며,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총고정투자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3.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외관상 무관해 보이는 회귀모형(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Zellner(1962)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으로 구성될 때 제안된 각 회귀식의 오차항 사이에 존재하는 동시적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정에 이용하여 단일 회귀분석 추정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정식체계(system of equation)를 통해 분석했다.[36] 각 다중회귀분석의 오차항이 상관성이 있다는 가정에서 각 추정식을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한다.

동시적 상관관계의 가정 하에서 SUR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분석할 수 있으며, 연립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식1: $Y_{\text{소득세율}}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소득세율}}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 \beta_5 X_{\text{복지예산증가율}}$

식2: $Y_{\text{법인세율}}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법인세율}}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 \beta_6 X_{\text{총고정투자율}}$

---

36) Arnold Zellner(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test for aggregation bias.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57 no.298 pp348-368.

4.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독립변수: t-1기)

정책을 논의하는 시점과 결정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어 t기의 결정된 결과(종속변수)는 t-1기의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지형 변화 등의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t-1기의 독립변수는 t기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SUR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한 회귀분석(독립변수: t-1)은 다음과 같다.

$$Y_{\text{소득세율, t}}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소득세율, t-1}}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t-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t-1}}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t-1}} + \beta_5 X_{\text{복지예산증가율, t-1}}$$

$$Y_{\text{법인세율, t}}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법인세율, t-1}}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t-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t-1}}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t-1}} + \beta_6 X_{\text{총고정투자율, t-1}}$$

SUR 회귀분석의 연립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식1: $Y_{\text{소득세율, t}}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소득세율, t-1}}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t-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t-1}}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t-1}} + \beta_5 X_{\text{복지예산증가율, t-1}}$

식2: $Y_{\text{법인세율, t}} = \beta_0 + \beta_1 X_{\text{주요국평균법인세율, t-1}} + \beta_2 X_{\text{집권여당(보수=1), t-1}} + \beta_3 X_{\text{경제성장률, t-1}} + \beta_4 X_{\text{재정수지비율, t-1}} + \beta_6 X_{\text{총고정투자율, t-1}}$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같은 시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앞선 결과와 보완적으로 가설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다중회귀분석 및 SUR 회귀분석은 STATA 17.0을 이용해 분석했다.

5. 자료수집

다중회귀분석 및 SUR 회귀분석을 위해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개의 관측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했다. 40개년간 한국의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이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로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집권정당(더미변수, 민주당계=0, 보수정당=1)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밖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 증가율, 총고정투자율을 통제변수로 반영했다. 전체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8]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 및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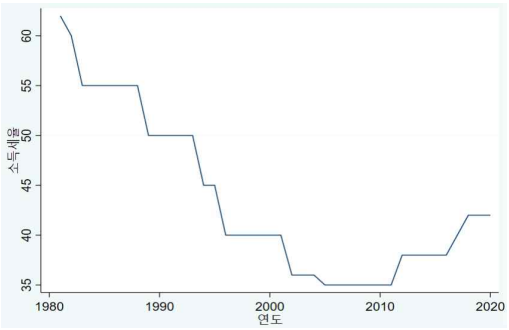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처
소득세율	40	43.53	8.073	35	62	국세청, 조세硏 등
법인세율	40	27.60	4.494	22	40	국세청, 조세硏 등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40	46.75	6.845	38.8	64.2	OECD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40	34.82	7.769	22.2	49.2	OECD
집권정당 (보수=1)	40	0.65	0.483	0	1	국회
경제성장률	40	6.13	3.960	-5.1	13.4	통계청
GDP 대비 재정수지비율	40	-0.09	1.718	-4.3	3.4	통계청
복지예산 증가율	39	15.99	11.518	-3.5	40.6	통계청
총고정투자율	40	32.48	4.233	27.2	42.1	통계청

각 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 변수이므로 시계열 그래프 및 Dickey-Fuller 테스트를 통해 정상성(stationarity)을 가진 자료인지 확인했다. 단위근이 없으면 정상적(stationary)이고 단위근이 있으면 비정상적(non-stationary)이며, Dickey-Fuller 테스트에서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Z 값이 음의 값을 크게 갖고, P-value는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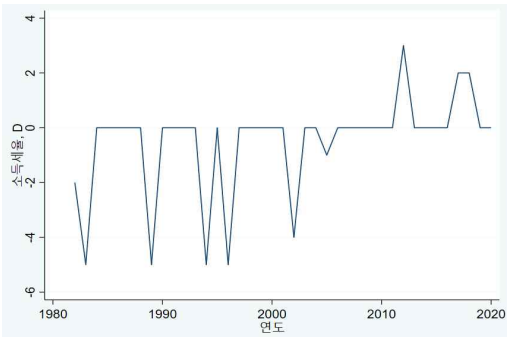
소득세율은 그래프를 살펴보면 하향 추세가 계속되다가 2010년 초반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Dickey-Fuller 테스트 결과 Z=-2.794로 유의수준 90% 수준에서 Z=-2.613보다 작으며, p-value는 0.0592로 유의수준 90% 수준에서 정상적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림 5] 소득세율 및 소득세율 차분 그래프

한국 소득세율 그래프



한국 소득세율 차분 그래프



[표 9] 소득세율 Dickey-Fuller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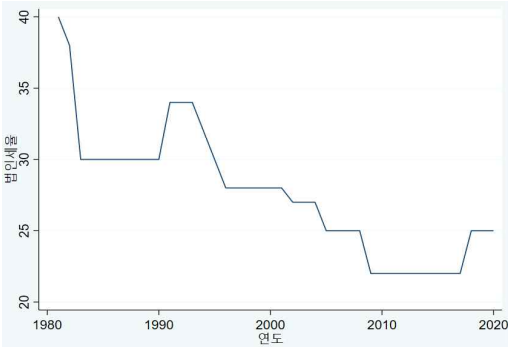
	Test Statistics	Dickey-Fuller critical value		
		1%	5%	10%
Z(t)	-2.794	-3.655	-2.961	-2.613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for Z(t) = 0.0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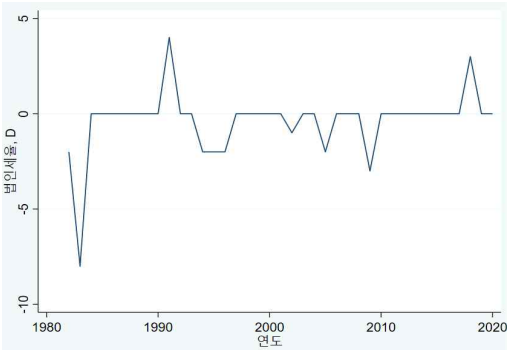
법인세율 역시 그래프를 살펴보면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추세가 완화 및 반등되고 있으며, Dickey-Fuller 테스트 결과 Z=-3.014로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Z=-2.961보다 작으며, p-value는 0.0336으로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정상적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림 6] 법인세율 및 법인세율 차분 그래프

한국 법인세율 그래프



한국 법인세율 차분 그래프



[표 10] 법인세율 Dickey-Fuller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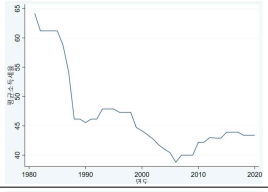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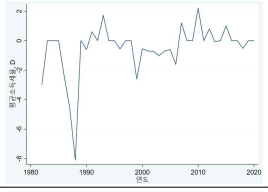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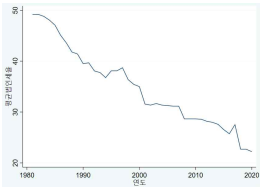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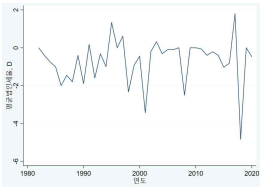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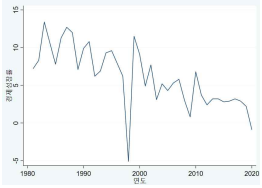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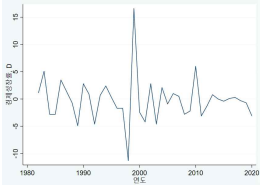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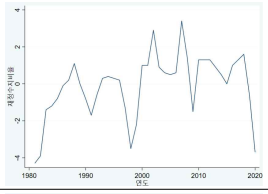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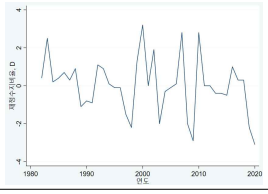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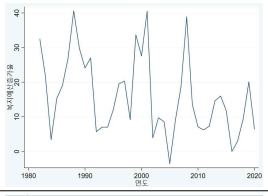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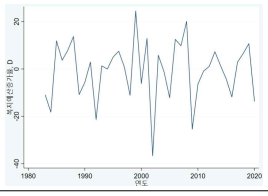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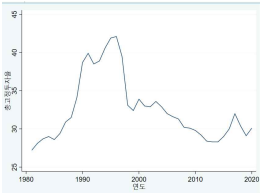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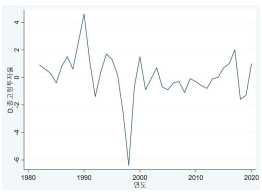
	Test Statistics	Dickey-Fuller critical value		
		1%	5%	10%
Z(t)	-3.014	-3.655	-2.961	-2.613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for Z(t) = 0.0336.

그 밖에 더미변수인 집권정당(보수=1)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에 대해 Dickey-Fuller 테스트를 진행했다.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95% 수준에서 유의하며, 복지예산증가율은 99% 수준에서 정상적이다. 다만,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및 총고정투자율은 일정한 추세가 나타나며, 차분도 발산하는 형태로 나

타나 비정상적 자료로 판단된다. 시계열 자료 중 가급적 정상성을 가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표 11] 각 독립변수의 그래프 및 차분 그래프

	그래프	차분 그래프	Dickey-Fuller Test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Z=-3.109<-2.961(5%) p-value = 0.0259 ※ 95%수준 정상적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Z=-0.921>-2.613(10%) p-value = 0.7810 ※ 비정상적
경제 성장률			Z=-3.507<-2.961(5%) p-value = 0.0078 ※ 95%수준 정상적
GDP 대비 통합재정 수지비율			Z=-3.325<-2.961(5%) p-value = 0.0138 ※ 95%수준 정상적
복지예산 증가율			Z=-4.085<-3.662(1%) p-value = 0.0010 ※ 99%수준 정상적
총고정 투자율			Z=-1.492>-2.613(10%) p-value = 0.5373 ※ 비정상적

제 5 장 회귀분석 결과

제 1 절 소득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인 소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요국의 평균 소득세율, 집권 여당이 민주당계인지 보수정당인지 여부(더미변수, 민주당계=0, 보수정당=1),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우선 F 값은 27.56, 유의확률은 0.0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정된 R-스퀘어 값은 0.7775로 77.8%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12] 소득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Model	1768.463	5	353.693
Residual	423.435	33	12.831
Total	2191.897	38	57.682

Number of obs	=	39
F(5, 33)	=	27.56
Prob > F	=	0.0000
R-squared	=	0.8068
Adj R-Squared	=	0.7775
Root MSE	=	3.5821

소득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 소득세율	0.743***	0.142	5.22	0.000	0.618
집권정당(보수=1)	1.240	1.341	0.93	0.362	0.079
경제성장률	0.423*	0.211	2.01	0.053	0.223
재정수지비율	-0.670	0.461	-1.45	0.156	-0.141
복지예산증가율	0.077	0.572	1.35	0.188	0.117
_cons	4.053	5.930	0.68	0.499	.

소득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p는 0.000으로 99%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나, 경제성장률 등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9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평균 소득세율과 한국의 소득세율은 정(+)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 주요국의 평균 소득세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율은 0.74%p만큼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세 부담은 우수한 인재 유치에 부담이 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등과 관련되므로 주요 국가들의 소득세율 인하 추세는 한국의 소득세율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24%p 높게 소득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집권정당 변수의 p=0.362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며 감세정책을 추진한다고 인식되나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왔다. 보수정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만 법인세율에 비해서는 그 주장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계가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 인하 추세가 계속된 반면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이 나타나는 등 집권정당의 이념과는 상이한 세율변동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

다른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이후 SUR 회귀분석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제 2 절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인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 집권 여당이 민주당계인지 보수정당인지 여부(더미변수, 민주당계=0, 보수정당=1),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총고정투자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우선 F 값은 22.54, 유의확률은 0.0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05에서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정된 R-스퀘어 값은 0.7341로 73.4%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13] 법인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Model	605.034	5	121.007
Residual	182.566	34	5.370
Total	787.6	39	20.195

Number of obs	=	40
F(5, 34)	=	22.54
Prob > F	=	0.0000
R-squared	=	0.7682
Adj R-Squared	=	0.7341
Root MSE	=	2.3172

법인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 법인세율	0.393***	0.090	4.34	0.000	0.679
집권정당(보수=1)	-1.268	0.863	-1.47	0.151	-0.136
경제성장률	0.072	0.157	0.46	0.649	0.063
재정수지비율	-0.684**	0.282	-2.43	0.021	-0.261
총고정투자율	0.254***	0.091	2.80	0.008	0.239
_cons	5.991	3.712	1.61	0.116	.

법인세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의 p는 0.000으

로 99%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의 p는 0.021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총고정투자율의 p는 0.008로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그 외의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선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평균법인세율과 한국의 법인세율은 정(+)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0.39%p만큼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화 등으로 자본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기업 이전이 나타나는 등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기업 및 자본 유치가 치열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법인세율 인하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27%p 낮게 법인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집권정당 변수의 p=0.151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보수정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부담 완화를 추구하지만 특히 소득세율이 비해 법인세율 인하를 강조하는 편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구축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특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인세율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음(-)의 관계가 도출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그 값이 커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므로 세율인하 여력이 생기고 실제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율이 총고정투자율의 영향 관계와 관련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의욕이 제고되며 총고정투자율이 상승하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의욕 감소로 총고정투자율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총고정투자율과 법인세율은 추이 상 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총고정투자율이 높으면 충분한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법인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있으며, 총고정투자율이 낮으면 투자제고 필요성이 있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고정투자율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율이 0.25%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3 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두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외관상 무관한 회귀분석(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추가로 실시했다. 주요국의 평균 세율 변화와 집권정당 여부(더미변수, 민주당계=0, 보수정당=1), 그 밖에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 총고정투자율이 종속변수인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Zellner의 SUR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는 13.132이며 Pr=0.0003으로 0.05보다 작아 두 방정식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와 같이 SUR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chi2가 162.15, p가 0.0000으로 유의미하며, R-스퀘어 값은 0.8034로 80.3%의 설명력을 갖는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chi2가 144.00, p가 0.0000으로 유의미하며, R-스퀘어 값은 0.7738으로 77.3%의 설명력이 있다.

[표 14]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결과

Correlation matrix of residuals :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1.0000	
법인세율	0.5803	1.0000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 Chi2(1) = 13.132, Pr = 0.0003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	Obs	Params	RMSE	R-squered	chi2	P>Chi2
소득세율	39	5	3.324	0.8034	162.15	0.0000
법인세율	39	5	1.911	0.7738	144.00	0.0000

	Coefficien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소득세율						
평균소득세율	0.669***	0.119	5.60	0.000	0.435	0.903
집권정당(보수=1)	1.396	1.226	1.14	0.255	-1.006	3.798
경제성장률	0.526***	0.185	2.84	0.005	0.163	0.889
재정수지비율	-0.848**	0.411	-2.06	0.039	-1.653	-0.043
복지예산증가율	0.040	0.043	0.92	0.359	-0.045	0.125
_cons	7.363	5.002	1.47	0.141	-2.440	17.166
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0.313***	0.665	4.70	0.000	0.183	0.443
집권정당(보수=1)	-1.182*	0.704	-1.68	0.093	-2.562	0.197
경제성장률	0.155	0.119	1.31	0.192	-0.078	0.388
재정수지비율	-0.576**	0.228	-2.52	0.012	-1.023	-0.128
총고정투자율	0.288***	0.649	4.44	0.000	0.161	0.416
_cons	6.917	2.518	2.75	0.006	1.982	11.85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율의 경우 앞선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가 다중회귀분석보다 소폭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며, 특히 경제성장률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에 대해서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기존 회귀분석에서는 주요국의 평균 소득세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율은 0.74%p만큼 하락한다는 결과였으나, SUR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0.67%p만큼 하락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40%p 높게 소득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회귀분석 결과인 1.24%p에 비해 더 큰 값으로 도출됐다. 다만, 집권정당 변수의 p=0.255로 그 값은 줄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일반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p=0.005로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으며, 소득세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소득세율은 0.53%p 증가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세 부담을 늘릴 여력이 있어 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성장이 저조한 시기에는 소비 여력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소득세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일반 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p=0.039로 9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세율과는 음(-)의 관계를 갖으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p 증가하면 소득세율은 0.85%p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그 값이 커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할 경우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므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기고 실제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예산증가율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소득세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복지예산증가율이 1%p 증가하면 소득세율은 0.040%p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다.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수 마련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특히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이 감소할 뿐 만 아니라 감소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세원으로서 개인소득세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37]이으므로 소득세율과 복지예산증가율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앞선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나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가 일반 회귀분석보다 소폭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며, 추가적으로 집권정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우선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기존 회귀분석에서는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0.39%p만큼 하락한다는 결과였으나, SUR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그 정도가 소폭 감소하여 0.31%p만큼 하락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7) 김미경(2006). p.7-43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18%p 낮게 법인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회귀분석에 비해 더 작은 값으로 도출됐다. 다만, 집권정당 변수의 p값은 0.093으로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보수정당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p=0.012로 9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과도 음(-)의 관계를 갖으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율은 0.58%p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법인세율 역시 재정건전성이 좋을 경우 세율인하 여력이 생기고 실제 인하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총고정투자율은 기존 회귀분석 결과 1%p 증가하면, 법인세율이 0.25%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UR 회귀분석 결과 0.29%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한편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법인세율은 경제성장률과는 정(+)의 관계를 가지며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법인세율은 0.15%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역시나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하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마련을 위한 세수확보의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그에 우선하여 법인세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등이 논의된다.

SUR 회귀분석의 결과를 각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계수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일반 회귀분석에 비해 변수들의 설명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계수 값 역시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변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방정식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SUR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되 각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표 15] SUR 회귀분석 및 각 회귀분석 결과 계수 비교

	SUR 회귀분석 결과	소득세율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율 회귀분석 결과
소득세율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0.669***	0.743***	
집권정당(보수=1)	1.396	1.240	
경제성장률	0.526***	0.423*	
재정수지비율	-0.848**	-0.670	
복지예산증가율	0.040	0.077	
_cons	7.363	4.053	
법인세율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0.313***		0.393***
집권정당(보수=1)	-1.182*		-1.268
경제성장률	0.155		0.072
재정수지비율	-0.576**		-0.684**
총고정투자율	0.288***		0.254***
_cons	6.917		5.991

제 4 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독립변수: t-1기)

정책을 논의하는 시점과 결정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시점 간 시차를 고려하여 각 전기(t-1기)의 독립변수는 t기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SUR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SUR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어,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하고 이후 계수 비교만 했다. 이하 [표 16]에서는 SUR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표 16]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독립변수: t-1기) 결과

Correlation matrix of residuals :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1.0000	
법인세율	0.8412	1.0000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 Chi2(1) = 26.889, Pr = 0.0000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	Obs	Params	RMSE	R-squered	chi2	P>Chi2
소득세율	38	5	3.182	0.7972	168.65	0.0000
법인세율	38	5	1.600	0.8100	273.16	0.0000

	Coefficien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소득세율						
평균소득세율	0.617***	0.090	6.82	0.000	0.439	0.794
집권정당(보수=1)	1.798	1.176	1.53	0.126	-0.507	4.103
경제성장률	0.497***	0.163	3.05	0.002	0.178	0.816
재정수지비율	-0.654	0.404	-1.62	0.105	-1.445	0.137
복지예산증가율	0.014	0.028	0.51	0.609	-0.041	0.070
_cons	9.544	3.904	2.44	0.015	1.891	17.196
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0.252***	0.451	5.60	0.000	0.164	0.341
집권정당(보수=1)	-1.371**	0.588	-2.33	0.020	-2.524	-0.219
경제성장률	0.213**	0.088	2.43	0.015	0.041	0.384
재정수지비율	-0.394*	0.204	-1.93	0.054	-0.795	0.006
총고정투자율	0.366***	0.039	9.44	0.000	0.290	0.442
_cons	5.882	1.558	3.78	0.000	2.829	8.936

종속변수는 t기의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며, 독립변수는 전기(t-1기)의 주요국의 평균 세율 변화와 집권정당 여부(더미변수, 민주당계=0, 보수정당=1), 그 밖에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복지예산증가율, 총고정투자율이다.

Breusch-Pagan 검정 결과 chi2는 26.889이며 Pr=0.0000으로 0.05보다 작아 두 방정식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하기 보다는 이와 같이 SUR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chi2가 168.65, p가 0.0000으로 유의미하며, R-스퀘어 값은 0.7972로 79.7%의 설명력을 갖는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chi2가 273.16, p가 0.0000으로 유의미하며, R-스퀘어 값은 0.8100으로 81.0%의 설명력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율의 경우 앞선 SUR 회귀분석(독립변수: t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경제성장률과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이 1%p 인하되면 한국의 소득세율은 0.62%p 인하되는 정(+)의 관계이며,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가면 소득세율은 0.50%p 인상되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독립변수를 전기(t-1기)로 두고 분석하여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80%p 높게 소득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앞선 분석(독립변수: t기) 결과인 1.40%p 더 큰 값으로 도출됐다. 또한, 집권정당 변수의 p값은 0.126으로 앞선 분석(독립변수: t기)의 p=0.255로 그 값은 줄었으나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독립변수가 전기(t-1기)인 경우 기존 분석(t기)보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수가 많아졌다.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과 총고정투자율에 대해서는 99%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집권정당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한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앞서 분석에서는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9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우선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기존 SUR 회귀분석(t기)에서는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0.31%p만큼 하락한다는 결과였으나, 독립변수를 전기(t-1기)로 하는 경우 0.25%p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됐으나 계수 값은 다소 작아졌다.

다음으로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법인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보수정당(더미=1)의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1.37%p 낮게 법인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값은 0.020으로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소득세율과 달리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민주당계가 집권하는 시기보다는 낮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경제성장률이 1%p 올라가면 법인세율은 0.21%p 올라가는 정(+)의 관계이며, 총고정투자율이 1%p 올라가면 법인세율은 0.37%p 올라가는 정(+)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다. 또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p 증가하면 법인세율은 0.39%p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가지나 95%수준이 아닌 90% 수준(p=0.054)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변수가 전기(t-1기)인 경우의 SUR 회귀분석를 각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특히 법인세율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결과보다 SUR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설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SUR 회귀분석 및 각 회귀분석 결과(독립변수: t-1) 계수 비교

	SUR 회귀분석 결과 (t-1기)	소득세율 회귀분석 결과 (t-1기)	법인세율 회귀분석 결과 (t-1기)
소득세율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0.617***	0.735***	
집권정당(보수=1)	1.798	1.544	
경제성장률	0.497***	0.389*	
재정수지비율	-0.654	-0.400	
복지예산증가율	0.014	0.031	
_cons	9.544	4.597	
법인세율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0.252***		0.342***
집권정당(보수=1)	-1.371**		-1.497*
경제성장률	0.213**		0.124
재정수지비율	-0.394*		-0.509*
총고정투자율	0.366***		0.295***
_cons	5.882		5.886

제 5 절 분석결과 및 한계

이상에서 조세인하경쟁가설인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이 한국의 세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세율변동가설인 “집권 정당의 정치성향이 한국 소득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관련하여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가 한국의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독립변수가 각각 t기와 t-1기인 경우 SUR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SUR 회귀분석 독립변수 t기 및 t-1기 계수 비교

	SUR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기)	SUR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1기)
소득세율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0.669***	0.617***
집권정당(보수=1)	1.396	1.798
경제성장률	0.526***	0.497***
재정수지비율	-0.848**	-0.654
복지예산증가율	0.040	0.014
_cons	7.363	9.544
법인세율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0.313***	0.252***
집권정당(보수=1)	-1.182*	-1.371**
경제성장률	0.155	0.213**
재정수지비율	-0.576**	-0.394*
총고정투자율	0.288***	0.366***
_cons	6.917	5.882

1. 조세인하경쟁가설 :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첫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소득세율은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과 동기(t기)와 전기(t-1기)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지며,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한국의 소득세율은 동기(t기)에 대해 0.70%p, 전기(t-1기)에 대해 0.62%p 인하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법인세율도 마찬가지로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과 동기(t기)와 전기(t-1기)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지며,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동기(t기)에 대해 0.31%p, 전기(t-1기)에 대해 0.25%p 인하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경쟁으로 인해 각 국가들의 세율이 인하될 경우 한국의 세율도 인하하게 됨을 확인했다. 특히 표준화 된 계수(beta)를 살펴보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은 1981년 64.2%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영향이 나타나는 2009년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반등되며 최근까지 인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한국의 소득세율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인상되며 국제적인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상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편이었다.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도 1981년 49.2%에서 2020년 22.2%까지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하락추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81년 40%에서 2017년 22%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18년 추세에서 일부 벗어나 25%로 인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주요국 평균세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나 최근 주요국에 비해 빠르거나 우선적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당세율변동가설 :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소득세율은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집권정당이 보수정당(더미=1)인 경우 민주당계(더미=0)에 비해 독립변수가 동기(t기)인 경우 1.40%p 전기(t-1기)인 경우 1.80%p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계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세율은 보수정당이 더 높은 세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계가 집권하는 시기 중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득세율 인하 추세가 이어져 실제 인하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계 집권시기에도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예되었으며 정권 말기에는 오히려 소득세율 인상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현석(2016)은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는 대통령의 감세의지와 달리 국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양극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른바 '부자 감세' 반대라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선호가 투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38]

법인세율은 소득세율보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집권정당이 보수정당인 경우 민주당계에 비해 독립변수가 동기(t기)인 경우 1.18%p, 전기(t-1기)인 경우 1.37%p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t기)인 경우 90%, 전기(t-1기)인 경우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다. 법인세율은 일반적인 인식대로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정당은 소득세율 인하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율은 인상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법인세율은 인하 또는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8) 박현석(2006). p.143.

3. 그 밖의 변수에 대한 설명과 한계

통제변수 중 경제성장률은 소득세율과 99% 수준에서 동기(t기), 전기(t-1기) 모두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됐으며, 법인세율과는 전기(t-1기)에는 95% 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가지나 동기(t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세율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호황기에는 세율인상의 부담이 적으며, 경제성장률이 낮은 침체기에는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확보를 통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인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각각에 대해서 동기(t기)에 95%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양(+)의 값을 가지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만큼 세율인하가 가능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그만큼 세수확보가 필요하므로 음(-)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회의록 등을 살펴봐도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율인상의 근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소득세율에 대한 별도의 지표로 재정수요나 복지에 대한 관심 등을 나타내는 복지예산증가율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그 계수값도 크지 않았다. 한편 법인세율에 대한 별도의 지표로 국가의 투자정도나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고정투자율은 법인세율과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의 투자여력이 있고 충분할 때 법인세율 인하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회귀분석을 검토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위와 같이 대체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으나 관측 값이 40개년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비정상성을 가진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연구에 일부 한계가 있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정권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율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국가 간 조세인하경쟁이 한국의 세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동기(t기)와 전기(t-1기) 독립변수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과 SUR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1. 조세인하경쟁가설 :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 간 조세경쟁 즉,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변화는 동기(t기)와 전기(t-1기) 모두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조세인하경쟁으로 인하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도 인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UR 회귀분석에 따르면 주요국의 평균 소득세율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소득세율은 0.67%p(t기), 0.62%p(t-1기) 하락하고, 주요국의 평균 법인세율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0.31%p(t기), 0.25%p(t-1기) 하락한다. 회귀분석 결과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라는 단어가 정부측 세제개편안이나 국회 회의록에 다수 등장한다. 의사결정의 가장 우선적인 요인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세율이나 세율 인하 추세이며, 경제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이나 양극화에 따

른 재분배 문제 등이 주로 강조되기는 했으나 보수정당의 감세와 민주당계의 증세 주장의 주요한 논리로 등장한다.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다른 경쟁국들도 세수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국내적 요인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세수확보가 우선되다 보니 국제적인 인하추세가 상대적으로 덜 고려된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도 및 중장기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세율인하 경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정당세율변동가설 :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는 SUR 회귀분석 결과 소득세율은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독립변수가 동기(t기)인 경우 1.40%p, 전기(t-1기)인 경우 1.80%p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율은 보수정당인 경우 민주당계에 비해 독립변수가 동기(t기)인 경우 1.18%p, 전기(t-1기)인 경우 1.37%p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t기)인 경우 90%, 전기(t-1기)인 경우 9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회귀분석결과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일부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소득세율은 민주당계가 더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계 집권시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율인하가 계속됐고, 보수정당은 소득세율 인하 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추진하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 각 정권별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집권정당에 따른 차이, 즉 보수주의 정당은 감세를 추구하고 진보주의적인 민주당계는 증세를 추구하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경제여건 및 재정건전성 등 경제상황과 정치지형에 따라 주장의 정도나 대립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

타났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여대야소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양극화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여당에서도 감세 추진에 부담을 느꼈으며 추가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감세정책 추진과 감세정책 유보의 대결 구도에서, 감세정책 추진과 증세정책 추진의 대결 구도로 변화했으며, 결국 소득세 증세로 이어졌다. 보수정당은 소득세율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 고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이어졌으나 정치 타협의 과정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소득세율이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앞서 정당세율변동가설은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정당에서 소득세율이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온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유사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공정성에 대한 열망,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핀셋 증세'의 형태로 증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정권 중반을 넘어서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여대야소 상황을 만들며 증세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후에도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충분한 재정확보 필요성 등으로 보수정당은 감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웠으며 여당의 뜻대로 증세정책은 계속됐다.

그 밖에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률은 소득세율, 법인세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소득세율, 법인세율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실제 국회 회의록에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건전성에 따라 두 정당의 입장이나 주장하는 정도가 바뀌기도 하며, 특히 증세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복지예산증가율과 총고정투자율과 관련하여 국회 회의록에서 복지예산의 증가나 투자정도, 성장잠재력 등은 간헐적으로 언급되기는 하나 부차적인 근거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3.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그리고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주요국의 세율변동, 경제성장률,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0년간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회귀분석에 앞서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의사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두 가지 가설, "(조세인하경쟁가설) 국가 간 조세경쟁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과 "(정당세율변동가설)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은 한국 세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에 따라 실제 국가 간 조세경쟁과 집권정당의 변화가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인식대로 조세인하경쟁은 한국 세율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으며, 집권정당의 변화는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 양상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세경쟁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결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변화추세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충분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율은 인하 경쟁이 끝나고 인상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만큼 한국도 조세경쟁의 측면에서 세율 인상 여력이 생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우선하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경쟁의 측면에서 최근 세율 인상 속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세율 결정시 중장기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으며, 경제상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국민의 요구가 정당의 입장으로 투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세율 결정과정은 복잡한 정치적 산물이므로 단순히 보수정당은 감세를 추진하고, 민주당계는 증세를 추진한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계가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율 인하추세는 계속됐으며, 보수정당이 다수를 구성하며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감세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정당이 유예안을 내며 세율인하가 유예된 바 있다.

이처럼 보수정당과 민주당계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주장의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증세와 감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수정당, 민주당계 모두 다양한 경제·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부담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간 선거를 앞두고 조세 부담의 강화나 중부담-중복지 논의 등이 이뤄졌으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논의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이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부담 강화에 대한 공약이나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각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세율에 대한 공약이나 당론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율과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대내외적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회귀분석 과정에서 관측 값이 충분하지 않고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연구결과에 다소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세율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분석한다면 회귀분석 연구 결과가 보다 뒷받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요인이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국회회의록

- 제226회 국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2001.12.21.)

- 제243회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 제11차 회의록(2003.11.20.)

- 제278회 조세소위원회 제10차 회의록(2008.11.28.)

- 제321회 국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2014.1.1.)

- 제346회 국회본회의 제15차 회의록(2016.12.2.)

권혁용·김항기(2015),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 정부당파성, 선거경쟁, 그리고 선거제도.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3호 pp.119-151.

김상겸(2021).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조세 정책방향의 모색. 산업연구 45권 2호.

김미경(2006). 세계화, 조세경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배갈등구조. 아세아연구 제49권 3호 p.7-43

김승래·류덕현(2010).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영·이창구(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4호

남궁현·권혁용(2008). 세계화시대 조세경쟁, 현실인가 신화(神話)인가? 한국정치학회보 Vol.42. pp.333-358

박현석(2014). 국제 조세인하경쟁과 자본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집 1호. pp.227-246

박현석(2016),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책: 국회-행정부 관계와

조세 정치.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신상화·김상현(2016). 불완전 노동시장하에서의 국가간 조세경쟁 모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2020). Competition in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 Evidence from 67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36, pp.101-133.

한국조세연구원(2012). 한국세제사 제1편.

Arnold Zellner(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test for aggregation bias.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57 no.298 pp348-368.

Arthur B.Laffer(2009), President Ronald Reagan's initial actions project.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staff

Devereux&Loretz(2013). What do we know about corporate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chicago vol.66, Iss.3 pp.745-773

Duane H. Swank(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Domestic Expenditure in the Affluent Democracies. 19, Marquette University

Frances Stokes Berry, William D. Berry(1992). Tax innovation in the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6, pp.715-742

Genevieve Tellier(2009). Les déterminants des recettes fiscales des gouvernements provinciaux canadiens : une étude empirique,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vol 52, pp.591-612

Hannes Winner(2009). Why is there no race to the bottom in capital taxation?. 2009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2009. pp.761-786

James M.Buchanan and Richard E.Wagenr(1977), 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ard keynes. Academic press.

R.H.Gordon and J.K.Mackie-Mason(1994). Why is there corporate taxation in a small open economy? The role of transfer pricing and income shifting. Cambridge.

Ripley, Randall B. and Grace A. Franklin. (1987).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 Policy. Pacific Grove. The Dorsey Press

S.Bucovetsky(2009). Asymmetric tax competi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v.30. issue2.

Swank, Duane(2002).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 and policy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nzi(1996).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uture of Tax System. IMF Working Paper.

Tiebout(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64.

< 참고기사 >

연합뉴스(2018.6.20.). 민경락 기자. “OECD '법인세보다 부가세 인상이 재원확보에 더 효율적”.

한국경제(2019.1.2.). 김현석 기자. “래퍼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참고] 회귀분석 기초 데이터

연도	소득 세율	법인 세율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주요국 평균 법인세율	집권 정당 (보수=1)	경제 성장률	재정 수지 비율	복지 예산 증가율	총고정 투자율
1981	62	40	64.2	49.2	1	7.2	-4.3	-	27.2
1982	60	38	61.2	49.2	1	8.3	-3.9	32.5	28.1
1983	55	30	61.2	48.8	1	13.4	-1.4	21.6	28.7
1984	55	30	61.2	48.1	1	10.6	-1.2	3.4	29.0
1985	55	30	61.2	47.1	1	7.8	-0.8	15.3	28.6
1986	55	30	58.8	45.1	1	11.3	-0.1	19.0	29.4
1987	55	30	54.3	43.6	1	12.7	0.2	26.9	30.9
1988	55	30	46.2	41.8	1	12.0	1.1	40.6	31.5
1989	50	30	46.2	41.4	1	7.1	0.0	29.8	34.1
1990	50	30	45.6	39.5	1	9.9	-0.8	24.1	38.7
1991	50	34	46.2	39.7	1	10.8	-1.7	27.0	39.9
1992	50	34	46.2	38.1	1	6.2	-0.6	5.7	38.5
1993	50	34	47.9	37.8	1	6.9	0.3	7.0	38.9
1994	45	32	47.9	36.8	1	9.3	0.4	7.0	40.6
1995	45	30	47.9	38.1	1	9.6	0.3	12.0	41.9
1996	40	28	47.3	38.1	1	7.9	0.2	19.5	42.1
1997	40	28	47.3	38.7	1	6.2	-1.3	20.3	39.5
1998	40	28	47.3	36.4	0	-5.1	-3.5	9.2	33.1
1999	40	28	44.7	35.4	0	11.5	-2.2	33.7	32.4
2000	40	28	44.2	35.0	0	9.1	1.0	27.6	33.9
2001	40	28	43.5	31.6	0	4.9	1.0	40.5	33.0
2002	36	27	42.7	31.4	0	7.7	2.9	3.9	32.9
2003	36	27	41.7	31.7	0	3.1	0.9	9.7	33.6
2004	36	27	41.0	31.4	0	5.2	0.6	8.6	32.9
2005	35	25	40.4	31.3	0	4.3	0.5	-3.5	32.0
2006	35	25	38.8	31.2	0	5.3	0.6	9.0	31.6
2007	35	25	40.0	31.2	0	5.8	3.4	18.8	31.3
2008	35	25	40.0	28.7	1	3.0	1.4	38.9	30.2
2009	35	22	40.0	28.7	1	0.8	-1.5	13.5	30.1
2010	35	22	42.2	28.7	1	6.8	1.3	7.1	29.8
2011	35	22	42.2	28.6	1	3.7	1.3	6.2	29.2
2012	38	22	43.0	28.2	1	2.4	1.3	7.3	28.4
2013	38	22	42.9	28.0	1	3.2	0.9	14.6	28.3
2014	38	22	42.9	27.6	1	3.2	0.5	16.0	28.3
2015	38	22	43.9	26.5	1	2.8	0.0	11.8	29.0
2016	38	22	43.9	25.7	1	2.9	1.0	0.0	30.0
2017	40	22	43.9	27.5	0	3.2	1.3	2.9	32.0
2018	42	25	43.4	22.7	0	2.9	1.6	9.4	30.4
2019	42	25	43.4	22.7	0	2.2	-0.6	20.1	29.1
2020	42	25	43.4	22.2	0	-0.9	-3.7	6.4	30.1

[참고] 회귀분석 결과

1. 소득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기)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39
				F(5, 33)	=	27.56
Model	1768.46287	5	353.692574	Prob > F	=	0.0000
Residual	423.434565	33	12.8313505	R-squared	=	0.8068
				Adj R-squared	=	0.7775
Total	2191.89744	38	57.6815115	Root MSE	=	3.5821

소득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소득세율	.7429215	.1422111	5.22	0.000	.6176505
집권정당_보수1	1.240229	1.340691	0.93	0.362	.0793585
경제성장률	.4233863	.2108322	2.01	0.053	.2234316
재정수지비율	-.6704317	.4612342	-1.45	0.156	-.1409906
복지예산증가율	.0769143	.0571658	1.35	0.188	.116646
_cons	4.053842	5.929791	0.68	0.499	.

2.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기)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40
				F(5, 34)	=	22.54
Model	605.03422	5	121.006844	Prob > F	=	0.0000
Residual	182.56578	34	5.36958177	R-squared	=	0.7682
				Adj R-squared	=	0.7341
Total	787.6	39	20.1948718	Root MSE	=	2.3172

법인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법인세율	.3928054	.0904707	4.34	0.000	.6790565
집권정당_보수1	-1.26805	.8626855	-1.47	0.151	-.1363026
경제성장률	.0717719	.1565194	0.46	0.649	.0632466
재정수지비율	-.6837391	.281811	-2.43	0.021	-.2613999
총고정투자율	.2541059	.0906228	2.80	0.008	.2393466
_cons	5.991281	3.712017	1.61	0.116	.

3. 소득세율·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기)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	Obs	Params	RMSE	"R-squared"	chi2	P>chi2
소득세율	39	5	3.323803	0.8034	162.15	0.0000
법인세율	39	5	1.911194	0.7738	144.00	0.0000

	Coefficien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소득세율						
평균소득세율	.6686961	.1194376	5.60	0.000	.4346027	.9027896
집권정당_보수1	1.395837	1.22566	1.14	0.255	-1.006412	3.798086
경제성장률	.5259691	.185214	2.84	0.005	.1629563	.8889819
재정수지비율	-.847998	.4109571	-2.06	0.039	-1.653459	-.0425369
복지예산증가율	.0397071	.0433106	0.92	0.359	-.0451801	.1245942
_cons	7.363041	5.001827	1.47	0.141	-2.44036	17.16644
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	.3129679	.0665476	4.70	0.000	.1825371	.4433988
집권정당_보수1	-1.182398	.7036474	-1.68	0.093	-2.561521	.196726
경제성장률	.1550744	.1187346	1.31	0.192	-.0776412	.38779
재정수지비율	-.5757802	.2282302	-2.52	0.012	-1.023103	-.1284572
총고정투자율	.2883522	.0649428	4.44	0.000	.1610666	.4156378
_cons	6.91662	2.517678	2.75	0.006	1.982061	11.85118

Correlation matrix of residuals: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1.0000	
법인세율	0.5803	1.0000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chi2(1) = 13.132, Pr = 0.0003

4. 소득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1기)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38
				F(5, 32)	=	25.91
Model	1521.29529	5	304.259059	Prob > F	=	0.0000
Residual	375.783654	32	11.7432392	R-squared	=	0.8019
				Adj R-squared	=	0.7710
Total	1897.07895	37	51.272404	Root MSE	=	3.4268

소득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소득세율1	.735038	.1374261	5.35	0.000	.6549857
집권정당1	1.544315	1.300796	1.19	0.244	.1036915
경제성장률1	.3894623	.2018729	1.93	0.063	.2116201
재정수지비율1	-.4001434	.4872214	-0.82	0.418	-.0835715
복지예산증가~1	.0306379	.0552352	0.55	0.583	.0494754
_cons	4.59723	5.824818	0.79	0.436	.

5. 법인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1기)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39
				F(5, 33)	=	23.33
Model	491.007006	5	98.2014011	Prob > F	=	0.0000
Residual	138.89043	33	4.20880091	R-squared	=	0.7795
				Adj R-squared	=	0.7461
Total	629.897436	38	16.5762483	Root MSE	=	2.0515

법인세율	Coefficient	Std. err.	t	P>|t|	Beta
평균법인세율1	.3416794	.0876568	3.90	0.000	.637186
집권정당1	-1.497332	.7685724	-1.95	0.060	-.1756342
경제성장률1	.1243665	.1407762	0.88	0.383	.1173592
재정수지비율1	-.5090313	.2948456	-1.73	0.094	-.2045862
총고정투자율1	.2950951	.0802385	3.68	0.001	.3095134
_cons	5.885788	3.508351	1.68	0.103	.

6. 소득세율·법인세율에 대한 SUR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t-1기)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	Obs	Params	RMSE	"R-squared"	chi2	P>chi2
소득세율	38	5	3.181501	0.7972	168.65	0.0000
법인세율	38	5	1.599815	0.8100	273.16	0.0000

	Coefficient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소득세율						
평균소득세율1	.6165442	.0903668	6.82	0.000	.4394285	.7936599
집권정당1	1.798132	1.176102	1.53	0.126	-.5069855	4.10325
경제성장률1	.4968658	.1628903	3.05	0.002	.1776066	.816125
재정수지비율1	-.6540806	.4036356	-1.62	0.105	-1.445192	.1370306
복지예산증가율1	.0144261	.0281894	0.51	0.609	-.0408241	.0696762
_cons	9.543611	3.904275	2.44	0.015	1.891372	17.19585
법인세율						
평균법인세율1	.2524211	.0450866	5.60	0.000	.1640531	.3407892
집권정당1	-1.371437	.5879128	-2.33	0.020	-2.523725	-.2191492
경제성장률1	.2125505	.0876227	2.43	0.015	.040813	.3842879
재정수지비율1	-.394478	.2044846	-1.93	0.054	-.7952606	.0063045
총고정투자율1	.3656968	.0387314	9.44	0.000	.2897845	.441609
_cons	5.882154	1.557995	3.78	0.000	2.828539	8.935768

Correlation matrix of residuals:

	소득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1.0000	
법인세율	0.8412	1.0000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chi2(1) = 26.889, Pr = 0.0000